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

해임, 대통령 결재만 남았다

법적 논란·야권 반발 등 후유증 클 듯 법원 鄭사장 손 들어줘도 퇴진 불가피

KBS 이사회가 8일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극심한 소란 속에 개최된 이날 임시이사회는 해임제청안 통과를 법적 논란과 함께 야권의 거센 반발 등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S의 최고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은 현실적으로 정 사장을 물러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절차는**=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제청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정 사장의 거취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해임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고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정 사장을 해임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내주 초 정 사장의 해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임시로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이사회는 곧바로 사장 임명 제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법은 K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장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사회는 지금까지 관행상 후보 공모 절차를 밟아왔으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 차기 사장 선임이 어떤 방식

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방송가에서는 새 사장 선임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은 불씨는**=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 사장의 거취는 결국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이사회의 해임 제청, 대통령의 해임이라는 과정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단 정 사장의 해임 제청은 KBS

안팎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언론시민단체, 정 사장의 해임에 반대해온 KBS PD협회,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사장의 퇴진을 주장해온 KBS 노조 측도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신입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이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해임 이후 검찰이 정 사장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정 사장을 해임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와 해임 근거가 적법한지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해 놓고 있다. 정 사장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정 사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해도 사장 교체라는 상황 자체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8일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회기가 열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경찰과 KBS 직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옥희씨 받은 돈 1억5천만원 주식 투자로 날려

김옥희 씨가 공천 추천 명목으로 받은 30여억원 가운데 2억원을 주식과 선물에 투자했다. 급세 1억5천만원을 잃는 등 반란하지 않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고 있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 씨의 '30억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

검사)는 김 씨가 김종원 서울서비스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3천만원 가운데 되돌려주지 않은 4억9천만원에 대한 막바지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김 씨가 상당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미확인 상태인 8천여만원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오피스텔 보증금 지급과 손자 외제차 구입,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을 썼으며 김 이사장한테 받은 돈 중 2억원을 주식과 선물에 투자했다. 1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천여만원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김 씨 계좌로 유입된 다른 돈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김 씨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여억원을 즉시 계좌에 넣지 않고 상당 기간 갖고 있다가 공천 발표를 전후로 입금한 경우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 외에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3명 중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김 씨가 또다른 '공천장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박연대 모 인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대규모 민간 방북 당분간 불허”

통일부, 남북 상황 고려 전교조 방북단 신청 반려

통일부는 8일 전교조의 북한 방문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민간의 대규모 방북을 당분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교조 방북단 69명의 방북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반려조치 했다”며 “다른 단체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0~14일 북한에서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갖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통일부에 69명에 대한 방북 신청을 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과격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남북관계 상황 고려할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순수 인도적 차원의 방북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필수 인원이란 과다한

인원이 가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도적 사업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핵문제 등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현재도 평양 빵공장, 병원 기술 지원, 종자 개량사업, 6자회담 관련 대북 물자 지원 등을 위한 방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방북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의 판단”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언제까지든 안된다 여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상황을 봐가며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중 3~4곳은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전교조 외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14~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18~21일), 민노당(21일 또는 22일부터 4박5일) 등도 이달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학생본부가 지난 4일 통일부에 정식으로 방북을 신청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방북 불허 조치가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는 분리대응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정부의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지 남북관계를 파탄내거나 과거 회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전교조, 민노당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시위, 행정소송 등 향후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강력한 핵 검증체계 필요”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가 나을 후부터 행정절차상 가능해 지는데 대해 “우리는 (테러지원국) 45일만 최소한의 시간이지, 무언가가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말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

리핑에서 “우리는 (미 의회가 의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인) 45일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볼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45일은 최소한의 시간이지, 무언가가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말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

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검증체계가 확보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선결조건이 된다는 미 행정부의 최근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1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어도는 영토분쟁 대상 아니다”

정부, 中 자국 영토 주장 시정 요구

정부는 중국이 우리 수역내에 있는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소개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중국 국가해양국 사이트는

이 합의에 반한 것으로 중국 측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지난해 12월 24일자 자료를 통해 이어도가 2000년 경계수역 내에 있는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도는 마라도 남단에서 81해리 떨어져 있는 반

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147해리 떨어져 있다”면서 “명백하게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중이다.

한편 한·중은 지난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쳐 EEZ협상을 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두 나라 영토의 중간 지점에 EEZ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생활안내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파격! 破格! 획기적인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최소비용!으로 최고명강(最高名講)을!

토마토TOEIC	해커스TOEIC	맨투맨 영어	수강증 1개로
외국어 영어회화	TOEIC Speaking	중국어 일본어	2개 강좌 동시수강!

예슬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변함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www.donga.tv

T. 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월 26일	7월? 문제풀이특강	9월? 총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국비무료
원서접수 8월18~8월27일	8월 핵심이론 + 단원별 문제이해	10월 동등 모의고사 + 일일 단기특강	고용보험 환급과정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1위 ●선배형 격조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일몰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새롭 행정고시학원

사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직장이전, 오직공무원정당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

= 소방 방재청은 인력이 부족한 맞교대 격무부서에 올해안에 2,228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한다 =

7.9급 공무원원 합격

강좌 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교 보 보 복 군 토 건 전
정 행 무 세 원 활 공 정 호 건 지 무 목 측 산

하반기 시험

● 전담: 9급 세무직 및 전담직 9월 27일 209명 모집	● 개강 9월 1일(주·야간반 모집)	● 6개월 (준)회원 80만원
● 전복: 제2회 8, 9급 기술직 9월 27일 119명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 1년 (정)회원 120만원
● 중앙선관직: 9급 행정직 9월 27일 70명 모집		● 합격시까지 170만원

=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 222-4560